

#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양돈정책 개선방향

국제화 시대의 개방화 경제에 양돈산업이 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도의 개선과 산업구조 합리화 정착” “금융 세제의 지원 강화” “수출전략품목 지정과 지원강화” “민간 협조 체제에 의한 합리화” 등의 실현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는 길이다.



**정 화 진**  
(본회 부회장, 양돈산업정책 추진위원장)

지난 수년간 국내외의 경제여건은 커다란 변화를 걸어 왔다. 수출입이 자유화 되는 시점에서 개방화의 물결을 타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으며, 정치 민주화 못지 않게 민간경제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주도 경제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으며, 국제경쟁력 없이는 산업의 존립이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축산업도 마찬가지로 외국의 수입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수입원의 일원화(예컨대 유통사업단 같은 것)도 불공정 무역으로 몰아 허용하지 않을 듯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느낌이다.

지금까지 축산정책은 생산확대와 생산축소, 물가 안정, 영세업자 보호와 같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응급처치에 급급했고, 주로 국내 상황에만 매달려 있었던 실정이었다. 그러나 개방화의 물결이 축산



업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밀어닥쳐 과거 물가안정의 차원과는 달리 정치·경제·외교문제로 상식화 하게 되었다.

그동안 국제화 시대의 개방경제에 우리 정부의 대비가 얼마나 있었는지, 또 축소 균형에서 확대 균형을 위한 대비는 있었는지, 전문화·규모화·합리화를 위한 준비는 얼마나 제도와 정책에 반영되어 있었는지 묻고져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민과 관이 힘을 합하여 내실을 다지고 강력한 개방압력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부정책이 커다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지. 개선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 양돈산업의 여건변화와 정책목표의 설정

양돈산업은 생산 구조적인 면에서 전업화·규모화·합리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농외거대 자본의 새로운 참여 억제와 더 이상의 확대는 양돈산업 안정에 큰 위협이 될 것이고 또 영세 부업 양돈인의 대책이 문제이다. 부업은 부수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 논외로 하고 영세양돈업은 가능성을 보아 전업화·규모화가 되도록 지원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 이외 타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되고, 국내식품의 공급자로서 또 기왕이면 수출에 일역을 담당함으로써 당당한 양돈인이 되기 위하여 국제경쟁력 제고는 국제화 시대의 첫째가는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야 말로 국제화 시대에 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민관 일체의 협조만 잘 된다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면서, 정부의 양돈정책 개선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 첫째, 제도의 개선과 산업구조 합리화 정착

국제위주의 등록제도를 철폐하고 육성 위주로 전환하여 중소 양돈업의 전업화·규모화·합리화를 지원하고 농외 거대자본의 참여 억제를 제도화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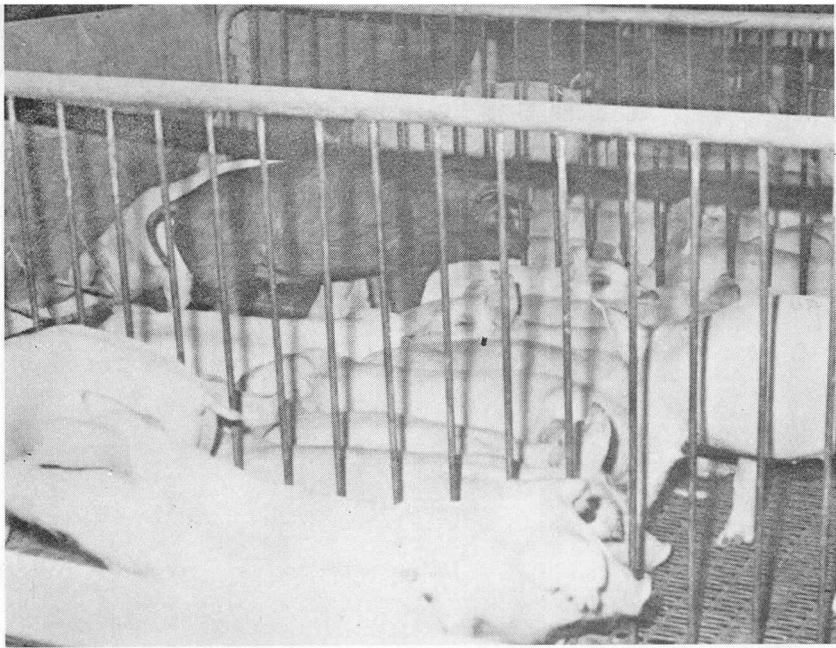
또, 영세업자가 착실한 전업화와 규모화를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둘째, 금융 세제의 지원 강화

국민식생활의 안정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질의 육류를 저가에 공급해야 하는 축산업에 대한 국가적 기대와 자본회전을 및 수익성이 낮은 특성을 고려해 시설의 합리화를 위한 중·장기 저리 자금이 크게 확충되어야 하겠다. 사람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양돈장의 작업환경은 더욱 합리화 되고 좋아져야 할 것이다. 폐수처리 대책이 세워져야 하고 분뇨작업과 사료급이 시설이 반자동 또는 완전 자동화 되어야 하며 돈사내 온도와 환기는 더욱 좋아져야 할 것이다. 금년에 시험적으로 돈사 시설 합리화 자금이 선을 보였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설개선 자금이 확대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부가세는 조세의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농기구, 농약, 비료와 마찬가지로 사료에 대한 부가세는 철폐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사료구입시의 부가세가 생산비의 7%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1%를 다투는 국제경쟁력에 얼마



나 큰 장애요인인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란다.

### 세째, 수출전략품목 지정과 지원 강화

양돈은 가까운 대일수출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합리적 지원만 있다면 적어도 연간 10만톤 이상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에 있어 국제에 의한 축소 균형을 하려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규모화·합리화를 지원하고 질과 양의 양면에서 확대 균형을 도모함이 국제화 시대에 타당한 대응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수출기반 시설의 확충, 금융세계의 지원, 나아가 수출보조금까지도 고려하는 강력한 수출지원체제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공격은 최상의 방어란 말이 있듯이, 양돈업 생산물의 수출은 축산업 전체에 큰 활력소가 되어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줄 안다.

### 네째, 민관협조체제에 의한 합리화 행진의 지속

양돈에 있어 폐수의 양을 점차 줄이고 있고, 더러는 무공해 양돈을 하는 생산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처리시설이 지나치게 커서 불필요하게 법이 규정되어 있다면 자금과 인력 및 토지의 낭비일 뿐이며, 국력의 불필요한 소모로 실정에 맞게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또, 농지를 전용해서 양돈의 규모화를 도모함으로써 전답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이 또한 소망스럽다. 파이프 하우스로 양돈장을 지어서 외관상 단정하고 건축비가 싸게 들고 실용적이어서 도시 발전에 방해가 안된다면 어떤 형태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양질의 돈육을 값싸게 생산·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것이며, 국제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것이며, 시장을 늘려 생산을 더 확대 할 수 있는 확대균형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문제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와의 협조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이루어 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여진다. 정부가 양돈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 전업화·규모화·합리화가 순리적으로 이루어져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산자는 생산성의 제고와 생산비의 인하, 육질의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수급 조절 관계 및 대정부 건의 등은 협회의 자율성 제고와 활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관협조야 말로 양돈산업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선진국화 할 수 있는 고속도로일 것이다. \*